

규제연구 제22권 제2호 12월

# 경제력집중 규제론, 무엇이 문제인가

- 일반집중 추세분석을 중심으로 -

황인학\* · 최원탁\*\*

경제민주화는 지난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여·야 정치권의 공통 화두였고, 2013년 새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구체적 제도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민주화가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한 이면에는 경제력집중 현상에 대한 우리 사회의 깊은 우려가 함께 하고 있다. 경제력집중은 일반집중, 복합집중, 시장집중, 소유집중을 포함하는 다의적 개념이다. 이 중에서 각국의 정부가 정책규율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소비자후생과 직결되는 시장집중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제민주화 논쟁과 대선공약에서 보듯이 일반집중의 문제를 중시하는, 매우 독특한 규제 프레임을 견지하고 있다. 세계화 개방경쟁 시대에 각국의 시장제도와 기업정책은 국제적으로 수렴하는 추세인데 경제력집중 규제에 관한 한 한국적 특이성이 지속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러한 의문과 관련, 이 글에서는 경제력집중 폐해 가설의 내용과 한계를 재평가하는 한편, 최근 10년 동안의 경제력집중 변화추이를 추정·분석한다. 분석 결과,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GDP 기준 집중지표는 최대 60%의 上向偏倚와 함께 추세 해석상 錯視를 야기하는 등 경제력집중의 실상을 왜곡 전달하는 오염된 척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핵심 용어: 경제력집중, 기업패권, 경제민주화, 기업집단, 경쟁정책

\*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inhak@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ochoi@keri.org)

\*\*\* 본 논문은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 ‘경제력집중 통계의 진실’을 학술 논문 형식에 맞추어 수정, 편집한 것임을 밝히며, 본 논문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주신 두분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립니다.  
접수일: 2013/8/5, 심사일: 2013/9/10, 게재확정일: 2013/10/11

## I. 들어가며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경제민주화의 열풍이 일면서 경제력집중 규제방안이 중요 현안으로 부상하였다. 민주당은 경제민주화의 최우선 과제로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집중 완화’를 직접 언급하면서 재벌에 대한 순환출자 금지 및 해소, 2009년에 폐지된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재도입, 지주회사 규제 강화, 금산분리 강화 등의 규제안을 공약하였다. 경제력집중에 대해 원인 규제를 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달리 새누리당은 ‘경제적 약자를 지켜주고, 잘못된 시장질서를 바로 잡겠다’면서 경제력 남용의 통제와 시정을 강조하였다. 경제력집중에 대한 與野 정치권의 정책처방은 서로 다른 면이 있어도 경제력집중의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는 차이가 없는 듯이 보인다.

선거는 끝났고 2013년 새 정부가 출범했으나 경제력집중의 억제 또는 경제력 남용의 방지를 위한 규제안의 입법화 과정에서 규제의 수위와 대상에 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돌이켜보면, 경제력집중은 전혀 새로운 쟁점이 아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 처음 제정되던 198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해묵은 주제이다. 그럼에도 경제력집중이 정치적, 사회적 쟁점으로 재연된 까닭은 무엇인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 전부터 내세운 ‘business-friendly’ 정책방향 때문에 경제력집중이 심화되었을 것으로 예단하는 경향, 그리고 세계적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모든 경제주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전자와 자동차 계열의 일부 기업집단은 오히려 수익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불거진 대·중소기업 양극화론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sup>1)</sup>

---

1) 2010년 여당의 지방선거 패배 이후, ‘2분기 삼성전자가 5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이익을 냈다는 소식이 가슴이 아팠다’, ‘파이는 대기업이 다 먹었다, 대기업이 얻는 성과가 중소기업으로 전혀 파급이 안 되고 있다’ 등 당시 장관급 인사들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는 ‘비즈니스 프렌드리’에서 ‘동반성장’

선거 전략의 측면에서는 이명박 정권과의 차별성을 보여야 하는 정치공학적 필요성과 함께 기왕에 경제민주화의 깃발을 내건 이상 정치권에서 재벌과 경제력집중의 문제를 부각시켜 강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경제력집중을 빌미로 기업의 구조와 행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경제민주화 공약경쟁을 벌이면서도 정작 경제력집중의 실상에 대한 객관적이고 진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재벌규제의 상징이었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방향,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숫자가 늘고 있다는 통계의 발표, 그리고 대기업들이 중기 업종과 골목상권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갈등이 생기는 사례의 언론 보도에 힘입어 경제력집중의 심화는 ‘굳이 검증이 필요 없는 당연한 사실’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과학적 분석을 대신하였다.

예를 들어 ‘최근 4년 동안 재벌의 계열사가 400개 늘었고, 2011년 5대 재벌의 매출액은 GDP의 절반을 넘었다<sup>2)</sup>’, ‘공정위에 따르면 2008년 55%였던 10대 그룹의 경제력집중도는 2010년에 75.6%까지 급증했다<sup>3)</sup>’는 주장에 접하면 경제력집중은 의심할 나위 없이 심각한 문제인 듯이 보인다. 그러나 한 기업이 신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별도의 계열사를 통해 할지 아니면 기존의 회사 내 사업부를 통해 할지는 전략적 선택 사안일 뿐, 계열사의 수는 경제력집중의 적절한 척도일 수 없다. 한 가지 음식을 파는 전문식당과 수많은 차림표로 무장한 범용식당 중 어느 쪽의 규모(매출액)가 더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다. GDP 기준으로 재벌의 매출액 또는 자산액의 비중을 계산하는 방식도 이론상 많은 문제를 내포한다.<sup>4)</sup> 문제가 되는 대기업들의 세계화, 현지화 전략에 따라 해외생산 비중이 늘어나면 GDP 대비 집중지표도 따라서 상승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 기업의 국내시장 독과점 또는 국내 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경제력집중은 해묵은 주제임에도 때만 되면 논쟁이 재연되는 근본적 이유는 객관적이고

---

으로 바뀌었고, 정치권에서는 ‘경제민주화’ 카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 2) 모 방송 보도(2012. 7. 16): “대기업의 무차별 영토 확장도 문제입니다. 슈퍼마켓에 빵가게에 물티슈까지 골목상권과 서민업종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몸집을 불렸습니다. 최근 4년 동안 35개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는 400개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5대 재벌의 매출은 국내 총생산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경제력집중이 극심했던 외환위기 직전 수준에 바짝 다가선 겁니다.”
- 3) 모 일간지 기사 내용 일부(2011. 3. 1): “공정위에 따르면 2008년 55%였던 10대 그룹 계열사의 경제력집중도는 2010년에 75.6%까지 급증했다. 중소기업 설 자리는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가.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경쟁한 룰 속에서 경쟁한 결과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 4) ‘GDP를 사용한다면, 중소기업 자산집중도는 2008년 88%에서 2010년 94%로 증가했고 공공기관 자산집중도는 82%, 중소기업 매출집중도는 120%라는 주장도 사실이어야 한다’(전경련 보도자료).

신뢰할 만한 연구와 분석이 아직도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이 글에서는 경제력집중의 제 유형 중 일반집중에 특화하여 왜 한국 특유적인 규제론이 지속되고 있는지, 그리고 일반집중의 실상은 어떠한지에 대해 좀 더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한다. 여기에서 분석기간은 최근 10년(2001~'11) 동안이며, 종업원, 매출액, 자산액 등 다양한 변수를 사용하여 해당 변수별로 30대 그룹의 집중도를 추정하는 한편 변동 추이와 변동 요인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집중도 추정시 분자와 분모에 같은 성격의 변수를 일관되게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선행연구에 내재된 한계를 보완하는 한편, 기업집단의 다각화 지수를 별도로 추정하여 집중도 변화요인의 질적인 측면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우리나라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의 특징과 변천 과정을 요약하고 최근의 규제동향을 정리한다. 제3절에서는 베블렌(T. Veblen)에서 시작된 구제도학파의 기업패권론, 그리고 주류 경제학의 적대적 전통을 중심으로 경제력집중 규제론의 논거와 한계를 정리하고 평가한다. 제4절에서는 GDP 기준 집중도의 국제비교 분석을 통해 선행연구의 집중도 분석이 갖는 한계를 살펴보고 제5절에서 다양한 변수와 엔트로피 다각화지수를 이용, 최근 10년 동안 경제력집중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분석한다. 끝으로 제6절에서는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한계를 설명한다.

## II. 경제력집중 규제의 변천과정과 최근 동향

경제력집중에 대한 우려는 대기업 조직의 확산과 역사적 궤를 같이 한다. 유한책임 원리에 기초한 근대적 회사형태는 1602년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로 알려져 있으나 대기업 조직은 19세기 후반에 미국에서 비롯되었다. 미국에서 대기업 조직이 확산되고 경제력집중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1890년에 Sherman Antitrust Act를 제정하게 된다. 1911년 이 법에 의거하여 Standard Oil과 American Tobacco가 여러 회사로 강제 분할된 사건은 역사적으로 희소한, 매우 유명한 사례이다. 그러나 당시의 기업분할명령은 이 논문의 연구주제인 일반집중이 아니라 시장집중의 문제를 시정하고자 함이었다. 즉 동종업종의 사업자들이 트러스트 형태로 시장을 독점한 것이 문제가 되었고, 시장경쟁을 회복시킬 목적으로 기업분할을 명령했던 것이다. 서면법의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 반독점법 또는 경쟁법을 운용하는 대부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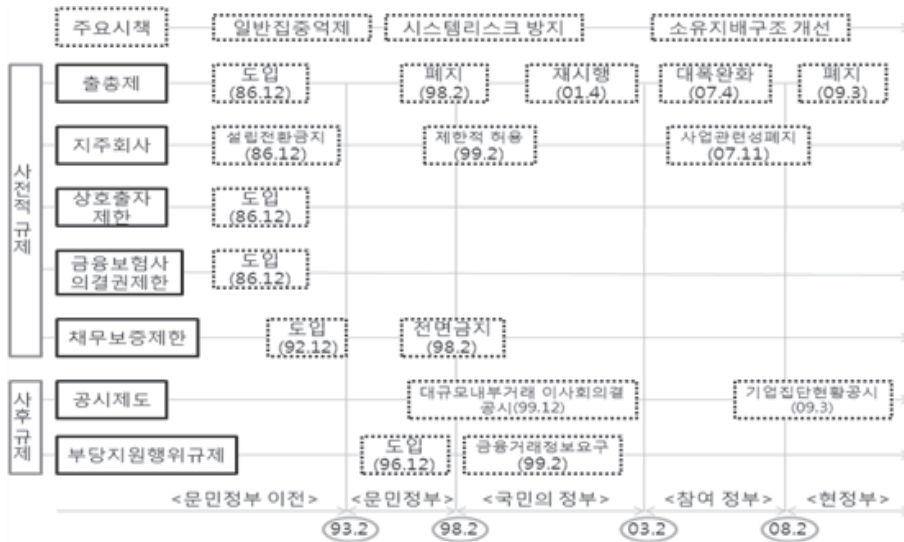
국가에서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경제력집중은 시장집중보다 일반집중에 가까운 개념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제1조(목적)를 보면, ‘과도한 경제력집중의 방지’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 중 ‘경쟁의 촉진’은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시장집중의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에 ‘경제력집중의 방지’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것이며 이때의 경제력집중은 동법 제3장(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의 규제내용에 비추어볼 때 일반집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기업집단의 모든 문제를 경제력집중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러한 특징은 공정거래연보(1996)의 다음 설명에서 엿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력집중은 ……기업집중(일반집중), ……시장집중(산업집중), ……소유집중, ……업종다각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경제력집중도 이와 같은 관점을 포괄하고 있으며, 특히 소수 특정인이 혈연을 중심으로 다수의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사실상 소유·지배하는 가운데 개별 기업의 독립경영이 아닌 선단식 그룹경영으로 계열사를 확장하고 영위업종을 다각화하여 시장을 독과점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p.115)”.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의 억제 목표는 동법이 제정된 1980년에 이미 천명되었지만 본격적인 규제는 1986년 법 개정 이후 시작되었다. 경제력집중의 정책 변천과정은 <그림 1>에 요약되어 있다. 시기별로 구분해 보면, 첫째,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시장집중 완화(경쟁촉진)보다는 일반집중, 복합집중, 소유집중 완화를 중시하는 경향이 높았다. 다른 나라에서는 일반집중과 소유집중은 시장집중의 문제를 초래하지 않는 한 정부가 사전 규제로 규율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는 반면, 우리나라는 소유집중과 일반집중을 직접 규제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다.<sup>5)</sup> 1990년대 전반에 김영삼 정부에서 출자총액제한 한도를 기존의 순자산액 40%에서 25%로 강화하면서 주식 소유의 분산과 업종전문화 기업에게는 출총제를 적용하지 않는 당근책을 썼던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그러나 업종전문화 정책은 해당 산업의 시장집중 문제를 심화시키고, 주식의 소유분산 정책은 소유·지배의 괴리를 확대시킴으로써 나중에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비판거리가 되었음을 상기하면 이들 정책은 논리적 모순 및 정책의 시간비일관성(time-inconsistency) 문제가 심각했음을 알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1994. 8. 20), “경제력집중의 실상과 공정거래법 개정방향”

<그림 1>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의 변화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11. 11

둘째, 외환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가 보강되면서 공정거래정책은 질적인 변화를 맞이한다. 정부에 의한 직접 규율보다는 이해관계자 참여에 의한 시장규율이 강조되고, 경제력집중 억제제를 위한 확실적인 사전규제는 완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공정위는 담합, 시장지배력의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한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의 적발 및 시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반면에 경제력집중 규제의 상징이었던 출총제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에 규제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완화되고,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완전 폐지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지주회사는 설립금지에서 제한적 허용으로 바뀐 후 2007년 노무현 정부에 와서는 지주회사에 적용되는 부채비율, 출자단계, 최소출자비율에 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하였다. 주목할 사실은 이명박 정부에서 지주회사 규제를 좀 더 완화하려 했으나 국회 법사위를 지배하는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며, 따라서 현행의 지주회사 제도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완성된 내용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경제력집중의 억제를 위한 지주회사 규제방안으로 민주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내용을 보면(<표 1> 참조), 정확하게 노무현 정부의 2007년 규제완화를 부인하고 그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라는 점에서 아이러니를 느끼게 된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제19대 국회에서는 경제력집중 억제에 위한 사전규제에  
서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로 가닥을 잡아가던 공정거래정책이 또 다시 전환점을 맞  
게 되었다. <표 1>에 정리된 경제력집중 규제 관련 법률 개정안에서 보듯이 출총제는 1980  
년대의 규제로, 지주회사 규제는 2007년 이전으로 회귀하고, 이전에 없던 순환출자 규제의  
신설을 포함하는 내용들이 경제민주화의 바람을 타고 공론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화 개  
방경쟁 시대에 국제적 정합성에 맞지 않는 규제는 기업 활동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제의 신설, 강화가 언급되는 까닭  
은 무엇인가? 경제력집중에 대해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이 새로이 발견되었는가 아니면 한국의  
경제력집중이 최근 들어와 과도하게 증가했기 때문인가? 다음 두 절에서는 이러한 의문에  
관해 살펴본다.

<표 1> 제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력집중 억제 관련 법률 개정안  
(2013년 3월 말 기준)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출자 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위 10대 기업집단에 대해 순자산의 30%로 제한(김영주 의원안), 또는 30대 기업집단에 대해 순자산의 25%로 제한(김기식 의원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새누리당: 규제부활 반대</li> </ul>
순환 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 순환출자 금지</li> <li>기존 순환출자 : 3년 내 해소/ 미해소시 의결권 제한 명령</li> <li>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모두에게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주당 발의안</li> <li>새누리당은 신규순환출자에 한해 금지 주장</li> </ul>
지주 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주회사 부채비율 : 200% → 100%</li> <li>자(손)회사 지분을 상장: 20% → 30%, 비상장: 40% → 50%</li> <li>자-손자 및 손자-증손회사간 사업연관성 요건 추가</li> <li>지주비율 산정시 자회사 주식가액 판단기준 변경 (장부가액 → 공정가액)</li> <li>두 개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공동지배 금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주당 발의안</li> <li>새누리당: 규제강화 반대</li> </ul>
금산 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결권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자기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한도를 5%로 축소</li> <li>은행소유제한: 2009년 개정 전 수준인 4%로 환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야 의견 비슷함</li> </ul>

### III. 경제력집중 규제론의 논거와 한계

#### 1. 제도학파의 기업패권가설(corporate hegemony hypothesis)

자원배분 효율의 관점에서 경쟁당국의 주된 관심사는 개별 시장의 독과점(시장집중) 문제이다. 그러나 경제력집중(일반집중)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학설도 없지 않다. 대표적인 가설은 구 제도학파(old institutional school) 계열에 속하는 학자들이 주창하는 ‘기업패권론’이다. 베블렌(T. Veblen)의 『유한계급론』에서 시작해서 갈브레이드(J. K. Galbraith)의 『불확실성의 시대』로 맥을 잇는 구 제도학파의 논리에 따르면 기업의 힘과 규모는 상호 보강관계에 있고 복합대기업에 의한 경제력집중은 필연적으로 증가한다고 한다. 이들에 의하면 ‘보이지 않는 손’의 시장경쟁 메커니즘에 의해 자원이 배분된다는 경제이론은 허구이며 사회 전반에 대기업의 힘과 강압(power and coercion), 즉 기업패권이 실재하고 작용한다는 관점에서 경제력집중의 폐해를 경고한다.

기업패권론의 요지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생산과 배분은 시장원리가 아니라 복합대기업에 의해 통제된다. 가격은 경쟁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대기업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뮌크리스-뇌들러(Munkris and Knoedler, 1987)는 전·후방 연관산업까지 포함해서 미국의 대기업들이 직, 간접적으로 계획, 통제하는 부문이 미국 경제 전체의 55~60%에 이른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둘째, 기업패권은 경제 영역에 머물지 않고 정치, 교육, 문화 등 사회 전 부문으로 확장되어 작용한다. 대기업들은 주어진 환경에 단순 적응하는 게 아니라 공익과 배치되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경기규칙을 바꾸려 한다. 더 나아가 대기업은 경제교육, 광고 및 홍보를 통해 富의 축적과정과 기득권을 정당화하고 확대 재생산하기 위하여 문화와 가치관을 변화시키려 한다. 셋째,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경제력집중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으며, 이를 막으려면 대기업을 민주적 통제하에 두어야 한다. 이에 관해 갈브레이드는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대기업이 시장의 꼭두각시이고 스스로 힘이 없고 소비자에게 봉사한다는 주장은 신화이며, 기업 권력을 연속화시키기 위한 책략일 뿐’이라 하면서 대기업의 이사회를 폐지하고 公共의 대표가 경영을 감독,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구 제도학파의 경제력집중 폐해 가설 중에는 경청할 대목이 없지 않을 것이다. 경제학의



창시자인 아담 스미스(A. Smith)도 시장경제의 敵은 정치권과 결탁하여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 하는 대기업이라고 일갈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과정이 민주화되고 대기업에 대해 비판과 견제기능을 하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발전, 그리고 국경을 무색하게 하는 개방경쟁 환경 등을 감안할 때, 기업패권론의 우려와 예언은 과장된 측면이 많다. 특히 경제력집중의 필연적 확대 예언은 기업패권론의 핵심 요지이지만 그 이후의 실증연구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거듭 확인되면서 논리적 기반을 잃었다. 예를 들면, 벌리-민스(Berle and Means, 1932)는 1909~1929년 기간 중 미국 200대 기업의 자산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하여 1929년에는 49%에 달했다며 그러한 추세라면 1950년에는 70%, 1972년에는 100%에 이른다고 우려 반, 예언 반 하였다. 결과는 물론 杞憂였다. 오토센(Ottosen, 1991)에 의하면 미국에서 M&A를 통해 복합대기업화 열풍이 일던 1960년대에 미국 500대 기업의 자산 점유율은 63%에서 69%로 다소 증가했던 적이 있었으나 1984년에는 다시 55%로 떨어졌다고 하며 ‘경제력집중의 一路擴大 가설’의 문제점을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과 경우가 다르지 않을까? 기업집단 형태가 보편화되어 있고 경제력집중이 끊임없는 논란거리였음을 감안하면 한국의 경제력집중은 계속 증가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질문에 대해 황인학(1997)은 기업집단을 분석단위로 한국의 경제력집중 현상과 추이에 대한 통계적 분석과 검증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서 저자는 한국의 경제력집중 역시 계속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집중의 수준에서도 변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반드시 높은 것만은 아님을 보인 바 있다. 예를 들면, 매출 변수 기준으로 30대 재벌의 비중은 80년대 후반의 48.0%에서 42.8%로 감소하여 기업패권가설은 한국에서도 통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그 이후 재벌과 경제력집중에 대한 실증연구가 늘면서 최정표(2004)는 분석기간을 1986~2002로 확장하여 검증하였는데 결과는 대동소이했다. 경제력집중은 단기적으로 오르락내리락하지만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없음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더 나아가 장지상·이근기(2011)는 상위 20대 재벌의 매출 비중이 2000년의 21.5%에서 2009년 16.8%로 감소했다고 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가 경제력집중의 심화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보인 바 있다.

## 2. 주류 경제학의 적대적 전통(inhospitability tradition)

주류 경제학의 일각에서도 경제력집중 규제론을 주창하는 경우가 있다. 경제력집중은 시장집중에서 파생하는 문제가 핵심이며 일반집중이나 사업다각화 활동이 시장집중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한 굳이 정부가 사전 규제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는 게 보통이지만 일부 학자들 중에는 복합대기업, 기업집단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없지 않다. 특히 코오즈(R. Coase, 1972)나 윌리엄슨(O. Williamson, 1987)에 의하면 수학적인 ‘완전경쟁균형’을 이상적인 상태로 확신하는 학자들 중에는 이 균형에 이르는 과정을 방해하는 경제현상이 관찰되면 이를 비정형 상태 또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로 간주하여 정부의 개입, 규제를 촉구하는 성향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완전경쟁균형이 성립하려면 모든 경제주체들이 상호간에 사실상 차이가 없는 원자적 경쟁(atomistic competition)을 가정해야 하는데, 현실에서 관찰되는 복합대기업 또는 기업집단의 존재는 경제학자들에게 익숙한 이론적 기업모형과 배치되기 때문에 적대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의 이와 같은 성향에 대해 코오즈는 다음과 같이 정리, 비판한 바 있다. ‘경제학자들은 기존의 이론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제현상에 접하면 독점화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레 해석하고 규제 처방을 들고 나온다.’<sup>6)</sup> 한편 윌리엄슨은 비정형적인 경제조직, 거래행태, 계약과 관련, 경제학계에서는 적대적 태도를 보였던 사례를 거래비용 분석방법으로 다시 살펴보면 정반대의 결론이 도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경제력집중에 대한 한국 특유의 문제의식이나 규제지향 태도 역시 ‘코오즈-윌리엄슨 비판’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즉 기업집단이 경제학 교과서의 기업모형과 다르다는 사실, 지금이야 기업집단은 세계 도처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사실(ubiquity and diversity)이 알려져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기업집단은 한국적 압축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비정형으로 이해한다는 점, 기업집단은 계열사 간 출자고리를 통해 사업의 범위와 회사의 수를 손쉽게 확장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집중은 당연한 현상일 것이라는 인식들이 형성, 고정화되기 십상일 것이다.

모크(R. Morck, 2009)는 기업집단을 경제력집중의 주범으로 보는 대표적 학자이다. 기업집

6) "If an economist finds something—a business practice of one sort or another—that he does not understand he looks for a monopoly explanation(Coase 1972, p.67)."

단의 피라미드 출자구조 때문에 기업집단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경제력집중이 더 빠르고 크게 확대된다는 것이다. 소수통제구조(controlling minority structure)로 특징되는 기업집단은 지배주주와 외부주주의 대리인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경제력집중 측면에서도 우려의 대상으로 본 것이다. 이에 모크(2005)는 1935년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 일환으로 배당소득에 대해 이중과세하는 규제시책 등을 통해 미국에서 피라미드 기업집단이 효과적으로 소멸되었다고 하면서 다른 나라에서도 피라미딩 규제를 해서 기업집단을 해체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बैं크-체핀스(Bank and Cheffins, 2010)는 모크(2005)의 연구가 역사적 사실이 아닌 꾸며낸 사례(fable)라고 고증을 통해 논박하였다. 당시 미국에는 피라미딩 그룹이 많지도 않았지만 남아 있던 그룹도 뉴딜 규제(이중과세)에 사실상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보인 것이다.<sup>7)</sup>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한때 경제민주화의 열풍 속에서 모크의 주장에 따라 법인 간 배당소득에 이중과세함으로써 재벌을 해체하자는 주장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법인 간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율이 이미 미국보다 높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 주장은 한바탕 해프닝으로 지나갔다.<sup>8)</sup> 이렇듯 2012년은 사회적 쟁점 사안에 대해 학문적 검증보다 정치적 재단이 앞서는 정치 과잉의 시기였고, 경제력집중 논란 또한 그 중의 하나였다.

#### IV. 선행연구와 오염지표(QDM)

경제력집중 및 재벌 정책 이슈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연구가 있었다. 최근의 연구로는 장지상·이근기(2011)와 위평량·김우찬(2011)을 들 수 있다. 장지상·이근기(2011)는 2000년 이후의 경제력집중 추이를 일반집중, 다각화, 소유집중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경제력집중 추이변화와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변화와의 관련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다. 장지상·이근기(2011)의 연구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 및 영위 업종 수 그리고 일반집중의 증가가 출자총액 및 지주회사 규제완화의 결과라는 증거는 발견하기 어려우며 기업집단의 관련 다각화 비중은 증가 추세이므로 기업집단에 대한 정책기조를 출자규제에서 소유집중으로 인한 폐

7) 이들 연구에서 뉴딜 규제의 하나였던 ‘공익지주회사금지법(PUHCA)’의 효과는 인정하고 있다.

8) 미국과 한국의 법인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 및 재벌세 관련 논쟁은 황상현·김현중(2012) 참조

해와 부당 내부거래로 인한 시장질서 왜곡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위평량·김우찬(2011)은 기업집단의 실질자산 증가, 계열사 증가, 계열사 편입유형, 업종진출 현황, 총수일가의 출자형태 등을 분석한 후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이들은 장지상·이근기(2011)와 달리 2000년대 후반부터 출총제 적용집단을 중심으로 자산과 계열사 수가 급증한 것은 출총제가 어느 정도 유효한 규제시책이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경제력집중 심화와 일감몰아주기, 회사기회 유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고 기업집단법 도입,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규제 강화, 일감몰아 주기에 대한 과세, 회사기회 유용에 대한 규율 강화 등의 정책처방을 제안하고 있다.

경제력집중에 대한 해석과 정책처방이 연구자별로 상이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집중도를 추정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집중도 추정은 연구목적에 따라 다른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분모, 분자에 서로 비교할 수 없는 변수를 사용하거나 대표성 없는 변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30대 기업집단의 2011년 매출액은 1천 345조 원으로서 명목 GDP를 추월했으며, 이런 집중화는 경제적 양극화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많이 접하게 된다.<sup>9)</sup> 여기에서 보듯이 많은 경우, 특정 대기업군(예: 30대 제벌)의 매출총액 또는 자산총액을 분자 변수로, 그리고 국내에서 생산된 부가가치의 합계인 GDP를 분모 변수로 이용하여 집중도를 추정하고는 한다. 이렇게 매출액/GDP, 또는 자산액/GDP를 추정하면, 대개의 경우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지표에 의존하는 연구자나 언론에서는 경제력집중의 일로확대를 주장하게 된다.

그러나 매출 또는 자산 변수를 GDP로 나눈 값을 경제력집중 지표로 사용하는 것은 이론상 문제가 많다. GDP는 국내에서 창출된 순부가가치의 합계인 반면, 매출액은 원자재 구입 비용까지 포함한 총액 개념인데다 거래단계마다 중복 계산되는 변수이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는 분자가 특정 대기업군의 매출 변수이면 분모 또한 경제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매출 총계를 사용함이 적합하고, 분모를 GDP로 한다면 분자 또한 특정 대기업군이 창출한 부가가치의 합계로 함이 적정하다. 그렇지 않고 매출/GDP 지표를 사용하면 경제력집중이 실제보다 부풀려 보이게 하는 錯視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기업집단은 시장거래비용을 절감할 목적으로 생성되었기 때문에 계열사 간 거래가 빈번하기 마련이며, 이 과정에서 매출액

9) 연합뉴스 2012. 8. 30.일자, '재벌 경제력집중 갈수록 심화'에서 발췌 인용

은 이중·삼중으로 중복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다른 모든 것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기업집단의 매출액은 사업부제 복합대기업의 매출액보다 과대 계상될 것이다. 또한 경제의 대외 개방도가 높고 국내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면서 생산의 상당부분이 해외 현지에서 담당하는 추세에서는 해당 기업의 매출액 상승이 해당 기업의 GDP 기여보다 빠르기 때문에 매출액/GDP를 추정하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문제도 발생한다.<sup>10)</sup>

자산을 GDP로 나눈 값을 사용하면 위의 문제 외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자산은 전기 자산에 신규투자를 더하고 감가상각을 감한 저장 변수(stock variable)로서 매년 누적되는 반면, GDP는 특정기간에 걸쳐 유량으로 측정되는 변수(flow variable)이다. 저장 변수(자산)를 유량 변수(GDP)로 나눈 값을 집중도 지표로 활용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적정하지 않다. 분모를 GDP로 한다면 분자 또한 해당 기업군이 창출한 부가가치의 합계로 합이 이론적으로 맞다. 그러나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액은 추정하기 쉽지 않고 2005년 이후 제조 원가명세서가 의무공시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추정이 불가능한 상태이다.<sup>11)</sup> 이와 같은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이론적 흠결, 그리고 사실관계의 왜곡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손쉽게 이용 가능한 GDP를 기준으로 경제력집중도를 추정, 사용하는 관행이 널리 퍼져 있다.

요약하면, 일상에서 널리 활용되는 매출액/GDP 또는 자산액/GDP와 같은 지표는 ‘측정과 이해는 쉽지만 오염된 지표(QDM: quick and dirty measure)’이다. 따라서 편의상 GDP를 모수로 하는 집중도를 굳이 사용해야 한다면 그 한계를 이해하고 해석에 상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경제력집중의 적정 수준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염 지표를 가지고 경제력집중이 과도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이며, 특정 환경에서는 매출액 또는 자산액의 증가 속도가 GDP보다 빠를 수 있음을 간과한 채 시계열 자료를 보고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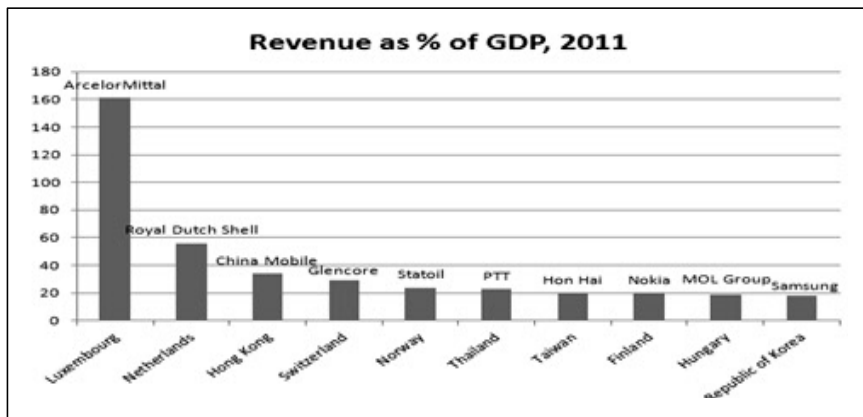
오염지표(QDM)를 꼭 써야 한다면 다른 나라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비교 평가를 하는 등의 보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GDP 대비 매출집중도를 다른 나라와 견

10) 예를 들면,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FDI)는 2005년 63.7억 달러 → 2012년 330억 달러로 5배 이상 증가했으나 외국인의 Inward FDI는 동 기간 중 63억 달러 → 99억 달러로 약 1/2 증가했다.

11) 30대 기업집단의 부가가치 집중도는 기초 데이터의 한계 때문에 신뢰할 만한 추정치를 얻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도 2004년까지는 제조 원가명세서에 근거하여 인건비 등 부가가치 구성요소를 추정하고, 2005년부터는 주석(註釋) 자료에 의존하여 추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일부 주요기업의 주석이 빠져 있는데다 2010년부터는 IFRS를 채택한 기업들의 경우 아예 註釋이 없어서 추계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주어 보자. 삼성그룹의 2011년 매출총액(비금융 210조 원)이 한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7.8%이며, 금융업을 포함해도 21.7%이다. 이를 가지고 한국의 경제력집중이 과도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동일한 잣대를 다른 나라에도 적용해서 집중도를 비교한 결과가 <그림 2>의 내용이다. 여기서 보면 룩셈부르크의 집중도(ArcelorMittal)는 161%에 이르고, 네덜란드(Royal Dutch Shell)는 56%에 달한다. 한국 1대 그룹의 집중도는 홍콩(China Mobile), 태국(PTT), 대만(Hon Hai)보다 낮다. 이와 같이 기왕에 QDM을 사용해야 한다면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상대적 수준을 가늠해 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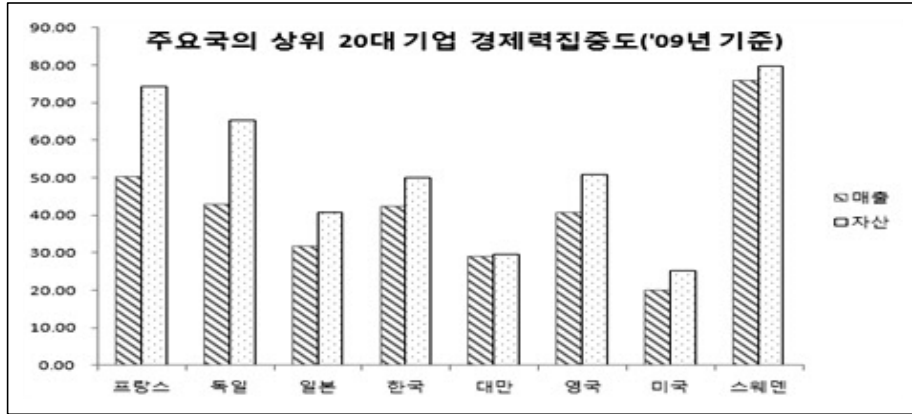
<그림 2> 대표기업의 GDP 대비 매출집중도 국제비교



자료: The Economist(8/25, 2012)에서 재인용. 삼성그룹 별도 추가

같은 방법을 상위 20대 기업으로 확장하여 선진국과 비교하면 어떤가? 그렇게 GDP 대비 자산집중도 및 매출집중도를 추정한 결과가 <그림 3>의 내용이다. 여기에서 보면 한국의 경제력집중은 미국이나 일본, 대만보다는 높지만 스웨덴보다는 크게 낮고, 프랑스, 독일과 비슷한 수준이다. GDP 대비 자산집중도는 스웨덴 > 프랑스 > 독일 > 한국 ≒ 영국 > 일본 > 대만 > 미국의 순서로 나타난다. 이 결과는 다시 말하면, GDP를 분모로 하는 오염척도를 가지고 국내에 국한된 분석을 할 경우 경제력집중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데 명백한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3〉 상위 20대 기업 경제력집중도 국제비교



주: 각국의 GDP 대비 매출집중도 및 자산집중도, GDP는 실질구매력 기준 환산 GDP

## V. 경제력집중의 추정 및 분석

### 1.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2001년에서 2011년 기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공기업 집단을 제외하고, 포스코와 KT 등 민영화 집단은 포함한 30대 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집중도를 추정, 분석한다. 분석 대상을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할 경우 기업집단의 수가 매년 변동되어 집중도를 일관되게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분석대상을 30대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 그리고 KISVALUE D/B와 연동하여 엔트로피 다각화지수까지 추정하는 방법론상 본 연구에서는 30대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중에서도 외감법인 이상만을 포함시키고 있다. 즉 30대 그룹의 계열사이지만 자산총액 100억 원이 안 되는 비외감법인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 2> 대규모기업집단 지정현황

(단위: 개, 조 원)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기업집단 수	49	51	55	59	62	79	48	53	55	63
소속회사 수	841	884	968	1,117	1,196	1,680	1,137	1,264	1,554	1,831
자산총액	652	696	778.5	873.5	979.7	1,161.5	1,310.6	1,472.2	1,690.5	1,997.6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전년도 기준

<표 3> 30대 기업집단 비금융업의 평균 계열사 수 및 영위업종 수 추이

(단위: 개)

구분		연 도	2001	2003	2005	2007	2009	2010	2011
계 열 사	4대	공정위	44.0	44.0	42.8	46.5	55.5	67.5	69.0
		외감 이상	24.3	27.8	29.5	32.8	39.8	45.5	49.5
	30대	공정위	17.6	17.9	19.8	25.6	29.4	34.0	37.9
		외감 이상	9.4	10.2	12.2	14.6	18.4	21.4	24.4
영 위 업 종	4대	공정위	20.0	21.0	22.0	25.3	29.0	31.8	32.3
		외감 이상	17.5	19.3	20.8	21.5	23.8	27.0	27.5
	30대	공정위	10.8	10.9	11.7	14.6	16.0	17.3	18.9
		외감 이상	7.5	7.8	9.1	10.6	12.4	13.6	14.5

주: 공정위 발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중 외감기업 이상 비금융 기업 기준

<표 3>은 30대 그룹(금융업 제외)의 연도별 평균 계열기업 수 및 영위업종 수를 나타낸다. 공정위 발표기준 30대 그룹(금융업 제외)의 평균 계열사 수는 2001년 17.6개에서 2011년에는 37.9개로 증가하였으며 중분류 기준 영위업종 수는 2001년 10.8개에서 2011년에는 18.9개로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외감기업 이상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살펴보면, 30대 그룹 전체 평균(금융업 제외) 계열사 수는 2001년 9.4개사에서 2011년 24.4개사로, 영위업종 수는 2001년 7.5개에서 2011년 14.5개로 증가하였다. 비외감법인을 제외함으로써 집중도 계산시 下向偏倚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비외감기업의 규모가 자산 100억 원 미만으로 작기 때문에 비외감기업의 제외가 집중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예를 들어 <표 3>에서 4대 그룹의 비외감법인 총수는 60개이나 이들의 자산총액 합계가 4



대 그룹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하다.<sup>12)</sup>

본 연구에서 경제력집중은 고용, 매출, 자산의 세 가지 변수로 추정, 분석한다. 분석에 사용되는 기초통계자료는 공정위의 대규모 기업집단 통계(Openi), KISVALUE DB,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통계, 통계청 고용통계이다. 구체적으로 자산집중도, 고용집중도, 매출집중도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며, 사업다변화 관련 엔트로피 지수는 뒤에서 별도로 설명한다. 자산 및 매출집중도와 관련, 본 연구에서는 분모 변수로 GDP가 아니라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통계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기업경영분석의 통계에 시계열 단층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정할 필요가 있다. 즉, 통계의 모집단이 2007년까지는 매출 25억 원 이상의 법인세 납부 기업이었으나 2008년부터는 매출 25억 원 이하 법인세 납부기업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2008년을 기점으로 통계 시계열에 단층이 발생한다.<sup>13)</sup>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계열 단층문제를 보정하기 위해 2009~2011년의 자료를 별도로 입수하여 통계 기준을 매출 25억 원 이상의 법인세 납부기업으로 통일한 자료를 분모로 집중도를 추정, 일관된 기준으로 시계열 분석을 행하였다.

$$*고용집중도 = 30대그룹 종업원 수 / 통계청 발표 임금근로자 수 * 100$$

$$*자산집중도 = 30대그룹 자산총계 / 기업경영분석의 전산업 자산총계 * 100$$

$$*매출집중도 = 30대그룹 매출총계 / 기업경영분석의 전산업 매출총계 * 100$$

## 2. 분석결과

### ① 경제력 일반집중

최근 10년 동안의 30대 그룹의 집중도를 추정한 결과를 <표 4>~<표 6>에 정리하였다. 개관하면 경제력집중은 어느 지표를 기준으로 보든 2009년 이후 최근까지 4대 그룹을 중심으로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뒤에 설명하겠지만 일과성 사건에 가까운 대규

12) 2011년 KISVALUE상의 4대그룹 자산총액, 594.5조 원으로 추정

13) 통계 기준의 단층을 감안하지 않으면 당연히 심각한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 2012년 11월, 국회 정무위 주최로 '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경제단체 대표는 '2008년 이전과 이후의 수치는 상호 비교할 수 없는 별개의 통계자료임'을 간과하고 집중도가 완화되었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당시 노회찬 의원으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추가내용은 각주 14 참조

모 M&A가 다수 있었고 과거에도 집중도의 연도별 騰落이 상당했음을 감안하면, 최근의 상승을 추세적 변화로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측면이 있다. 그러나 前代未聞의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유로존 국가의 재정위기까지 겹쳐 국내외 경제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상위 대규모기업집단의 국민경제적 비중이 다소 높아졌음은 사실이다.

〈표 4〉 30대 기업집단 비금융업 고용집중도 추이

(단위: 천명, %)

구분		2001	2003	2005	2007	2009	2010	2011
4대	집중도	1.9	2.1	2.3	2.4	2.5	2.8	3.0
5~10대	집중도	1.0	1.1	1.2	1.1	1.1	1.1	1.2
11~20대	집중도	0.4	0.5	0.8	0.8	1.0	1.2	1.2
20~30대	집중도	0.3	0.3	0.3	0.3	0.5	0.3	0.4
30대 전체	종업원 수	492	581	692	747	839	915	1,019
	집중도	3.6	4.0	4.6	4.7	5.1	5.4	5.9

〈표 5〉 30대 기업집단 비금융업 자산집중도 추이

(단위: 집중도, %)

구분		2001	2003	2005	2007	2009	2010	2011
자산	4대	17.3	18.1	16.9	17.7	16.1	17.5	18.9
	5~10대	8.4	7.8	8.9	10.3	10.1	10.5	10.5
	11~20대	4.6	3.4	5.5	6.7	6.7	6.7	6.6
	21~30대	2.3	2.8	2.9	3.4	3.6	3.3	3.5
	30대 전체	32.5	32.0	34.2	38.1	36.5	38.0	39.4

〈표 6〉 30대 기업집단 비금융업 매출집중도 추이

(단위: 집중도, %)

구분		2001	2003	2005	2007	2009	2010	2011
매출	4대	21.8	18.7	17.4	17.3	18.0	19.3	20.1
	5~10대	8.2	4.6	6.9	7.6	7.8	9.1	9.6
	11~20대	3.7	3.1	4.3	5.0	5.4	5.9	5.7
	21~30대	2.0	1.9	2.6	2.7	3.5	2.3	3.5
	30대 전체	35.7	28.3	31.2	32.6	34.8	36.5	39.0

먼저 <표 4>에서 고용집중도의 변화 추이를 보면, 다른 변수와 달리 30대 그룹(비금융업 외감법인 이상)의 비중이 꾸준히 일관되게 증가하였다. 즉, 30대 그룹의 종업원 수는 2001년 49만 명 ⇒ 2005년 69만 명 ⇒ 2009년 84만 명 ⇒ 2011년 1백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고용집중도는 2001년 3.6% ⇒ 2005년 4.6% ⇒ 2009년 5.1% ⇒ 2011년 5.9%로 증가했다. 특히 최근 3년의 고용집중도 증가분(0.7%p)을 분해해보면 4대 그룹의 기여(0.5%p)가 절대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자산 변수를 기준으로 보면, 집중도는 2001년 32.5%에서 2007년 38.1%까지 상승하다가 2009년에 36.5%로 낮아졌고, 2011년에는 39.4%로 다시 증가하였다.<sup>14)</sup> <표 5>에서 다소 흥미로운 사실은 2001~2011년 기간 중 자산집중도가 6.9%p(32.5% → 39.4%) 높아진 데에는 10대 그룹과 그 이하의 그룹이 각각 3.7%p와 3.2%p로 엇비슷하게 기여했으나 최근 3년(2009~2011)을 따로 보면 10대 그룹의 자산집중도 증가분(3.2%p)이 30대 그룹의 증가분(2.9%p)을 상회한다는 점이다. 환언하면 최근에 상위 대규모 기업집단의 자산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간을 늘려 중기적으로 보면 4대 그룹의 집중도는 16~18%대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매출기준 집중도는 2001년 35.7%에서 2007년 32.6%까지 떨어졌다가 2009년 34.8%, 2011년 39.0%로 최근에 비교적 크게 상승하였다.<sup>15)</sup> 매출은 자산보다 그 해의 업황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매출집중도는 자산집중도에 비해 매년 등락의 진폭이 비교적 큰 편이다. 그러나 최근에 매출집중도가 높아진 이면에는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의 해외매출 신장 등 업황적 요소도 작용하였으나 기업집단의 수직계열화가 한층 진전되면서 이른바 물량 몰아주기 내부거래로 알려진 계열사 간 거래가 증가했고 이들 중 상당부분이 중복계상(double-counting) 된 것도 주요요인의 하나로 추정된다.

연결재무제표를 이용하면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를 하나의 회사로 취급하여 연결 대상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모두 지배회사의 실적에 합산하여 매출액이 이중계상(과대평가) 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현행의 K-IFRS(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종속회사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율이 50%를 넘는 경우에만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된다. 그러나 공

14) 기업경영분석 통계를 보정하지 않고 사용하면, 30대 그룹의 자산집중도는 2009년 31.8%, 2010년 33.5%, 2011년 35.1%로 본 분석에 사용된 통계치보다 낮고, 시계열 추이 분석결과도 달라진다.

15) 기업경영분석 통계를 보정하지 않고 사용하면, 30대 그룹의 매출집중도는 2009년 32.4%, 2010년 34.2%, 2011년 36.7%로 본 분석에 사용된 통계치보다 낮게 나타난다.

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은 30% 지분을 기준을 사실상의 지배력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현행 회계기준으로는 동일 기업집단에 소속되어 내부거래에 의존하는 상당수의 계열기업 매출액이 이중계상 되는 문제를 피할 수 없다.<sup>16)</sup> 이처럼 매출집중지표는 고용집중지표나 자산집중지표와 달리 회계처리방식에 큰 영향을 받으며, 경제력집중의 실상을 왜곡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감독위원회에 의하면 2013년 회계연도 1분기부터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50% 미만이어도 사실상 지배력(De Facto Control)을 행사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 대상에 포함하도록’ K-IFRS를 바꾸겠다고 한다.<sup>17)</sup> 이렇게 될 경우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매출액 거품이 빠지면서 2013년도 매출집중도는 본 연구의 2011년 추정치에 비해 낮아질 것이다. 매출집중지표에 또 다른 한계가 내재하고 있음이다.

이처럼 일부 집중지표의 경우 추정과 해석에 상당한 유의가 필요하지만 고용과 자산, 매출 그 어느 것으로 평가하든 2009년 이후 경제력집중도가 증가했음은 사실이다. 그 원인을 따져보면, 전자(삼성그룹)와 자동차(현대·기아차그룹)의 글로벌 시장 약진 외에도 이 기간에 있었던 다수의 대형 M&A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 동 기간 중 30대 그룹의 자산집중도 변동요인을 미시 분석하면, 대부분의 증분이 현대·기아차, SK, POSCO, 삼성, LG, CJ그룹에 의해 주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 기간 중 기업집단별 자산집중도는 현대·기아차와 SK가 각각 1.0%p, POSCO 0.5%p, 삼성 0.4%p, LG와 CJ가 각각 0.3%p 증가했으며 이들 합계(3.5%p)는 30대 그룹의 증분(2.9%p)을 크게 상회한다. 이들 그룹의 자산비중이 증가한 까닭은 현대·기아차의 현대건설 인수(2011년), SK의 하이닉스 인수(2011년), POSCO의 대우인터내셔널 인수(2010년), 삼성의 메디슨 인수(2011년), LG의 해태음료(2011년) 및 대우엔텍 인수(2011년), CJ의 대한통운 인수(2011년) 등 대규모 M&A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했던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자산 비중은 2009년의 1.31%에서 2010년에는 0.60%로 약 0.7%p 감소하였다.

16) 예를 들어 현대모비스는 현대차의 지분 20.78%를 보유하고 있어 현행 기준으로는 연결대상이 아니다. 이에 현대모비스가 현대차에 공급한 중간재는 현대모비스의 매출로 계상되는 한편, 이 중간재는 완성차의 가격에 포함되어 현대자동차의 매출로 이중 계상된다. 또 SK C&C는 SK그룹 내 거래비중이 높지만 SK텔레콤, SK네트웍스, SK이노베이션 등 핵심 계열사들과 연결 대상이 아니다.

17) ‘현대차-모비스, SK-SK C&C…간간해진 회계기준 촉각’(매일경제, 2013. 5. 1)

② 다각화/전문화 추이

경제력집중 관련, 또 다른 쟁점은 대규모 기업집단의 사업다변화 전략이다. 경제력 일반 집중(A)과 시장집중(B), 다각화 지표(C) 사이에는  $A=B/(1-C)$ 의 항등식 관계가 성립한다(황인학, 2000). 위 식에서 대기업의 사업범위 확장(다각화)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일반집중에 영향을 미친다. 즉, 사업범위 확장은 대기업의 규모 팽창을 통해 일반집중을 높이는 반면에 새로 진출하는 시장에서의 경쟁촉진 효과(시장집중 완화)를 통해 일반집중 완화에 기여한다. 사업다변화 전략이 경제력집중에 미치는 최종 효과는 실증분석을 통해 판단해야 할 사안이지만 이는 본 연구의 대상이 아니다. 여기에서는 최근 10년 동안 30대 그룹의 사업다각화 추세를 살펴보고, 엔트로피 지수를 이용하여 기존 사업구조와의 연관성을 평가한다.

기업집단 전체의 매출(비금융업)에서 1대 업종 또는 3대 업종의 매출비중을 업종 특화율로 정의하고 추정해 본 결과는 <표 7>에 정리하였다. 집중도와 달리 업종 특화율은 연도별 등락이 잦은 편이나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특화율의 연도별 등락이 잦은 까닭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업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측정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특화율은 영위업종이 많고 다양한 상위 기업집단보다 하위 기업집단이 높고 연도별 편차도 큰 가운데 두 그룹의 특화율 격차는 점차 좁혀지는 추세를 보인다. 즉 2001년에는 4대 기업집단의 1대 업종 특화율이 53%로서 30대 기업집단의 평균치인 62%를 큰 폭으로 밑돌았지만 2011년에는 각각 53%와 57%로 그 격차가 줄었다.

<표 7> 30대 기업집단 비금융업 평균 특화율 추이

구분		2001	2003	2005	2007	2009	2010	2011
1 대	4대	53.3	54.5	59.3	57.8	57.7	56.6	53.0
	30대 전체	61.6	66.3	66.4	65.0	61.6	57.2	57.0
3 대	4대	85.8	81.2	84.0	81.5	81.1	80.4	76.6
	30대 전체	88.5	86.7	87.8	85.7	84.7	83.3	81.5

주: 1대 및 3대 업종이 해당 그룹의 비금융업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

엔트로피 다각화 지수를 추정해 보면, 이러한 특징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엔트로피 지수는 기업집단별 업종 다각화를 관련 다각화와 비관련 다각화로 분해하여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기업의 매출총액에서 각 업종의 비중, 영위업종 간의 관련성을 감안하여 추정된다. 총 다각화 지수는 소분류 업종의 매출액 비중을 동 값의 자연대수의 역수를 가중치로 하여 합산한 값으로 전문기업의 경우 0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다각화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관련다각화 지수는 소분류 업종의 매출액 지수를 중분류 업종의 매출액 지수로 나눈 값에 동 값의 자연대수의 역수를 곱하여 합산한 값으로 같은 중분류 산업의 여러 소분류 업종에 진출한 기업집단일수록 지수의 값이 높아진다. 엔트로피 지수의 구체적인 추정산식은 아래와 같다.

$$DT = \sum_{s=1}^S P_s \times DR + DU,$$

where S: 중분류 기준 총 영위 업종 수,  $P_s$ : 중분류 업종의 매출액 비중

① 총 다각화 지수:  $DT = \sum_{i=1}^N P_i \ln \frac{1}{P_i},$

where N: 소분류 기준 총 영위 업종 수,  $P_i$ : 소분류 업종의 매출 비중

② 관련 다각화 지수:  $DR = \sum_{i \in s} \frac{P_i}{P_s} \ln \frac{P_s}{P_i}$

③ 비관련 다각화 지수:  $DU = \sum_{s=1}^S P_s \ln \frac{1}{P_s}$

30대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엔트로피 다각화 지수를 추정한 결과가 <표 8>의 내용이다. 4대 기업집단의 경우, 2001년에는 관련 다각화 지수(1.4)와 비관련 다각화 지수(1.2)가 엇비슷했으나 지난 10년 동안 사업 연관성이 크게 개선된 결과 2011년에는 관련 지수(2.3)가 비관련 지수(1.5)를 크게 상회한다. 반면에 30대 기업집단 전체로는 관련 對 비관련 지수가 2001년에 0.4: 0.8로 시작하여, 2011년에도 0.9: 1.1로 여전히 비관련 지수가 다소 높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달리 말하면 상위 기업집단은 사업간 연관성(관련 다각화 지수)이 크게 높아진 반면에 하위 기업집단은 아직도 비관련 사업 다각화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집단일수록 사업간 연관성이 낮은 것은 이들 기업집단의 경우 한 두 개의 업종에 주력하기에는 특정 사업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이나 핵심역량이 아직 충분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8〉 30대 기업집단 Entropy 다각화 지수(비금융업)

구분		2001	2003	2005	2007	2009	2010	2011
4대	총 다각화	1.5	1.7	1.6	1.8	1.8	1.8	1.9
	관련 다각화	1.4	1.5	1.6	2.0	2.3	2.4	2.3
	비관련 다각화	1.2	1.3	1.3	1.3	1.3	1.4	1.5
30대 전체	총 다각화	0.9	0.9	0.9	1.1	1.1	1.2	1.3
	관련 다각화	0.4	0.4	0.5	0.6	0.7	0.8	0.9
	비관련 다각화	0.8	0.8	0.8	1.0	0.9	1.0	1.1

## ③ 두 가지 補論

경제력집중과 관련 두 가지 사안을 추가적으로 살펴본다. 첫째는 자산/GDP 또는 매출/GDP로 집중도를 추정하면 경제력집중의 수준과 추세 분석에 편의와 왜곡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앞서 지적하였는데 이 문제점을 계량적으로 다시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방법대로 자산액 또는 매출액을 GDP로 나눈 오염된 척도(QDM)로 2001~2011년 기간 중 집중도로 추정한 결과는 <표 9>의 A행에 표기하였다. 비교 목적의 편리를 위해 앞서 추정한 자산집중도와 매출집중도를 B행에 병행 표기하였다.

<표 9>를 보면 QDM 척도를 사용할 경우, 무엇보다 먼저 큰 폭의 상향편의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즉 2010년의 경우 30대 그룹의 집중도는 앞서 추정한 결과에 비해 50% 가까운 上向偏倚를 발생시키며 그 편차는 최근에 올수록 더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GDP를 분모로 매출액 또는 자산액을 분자로 하는 QDM 지표를 사용하면 경제력집중의 심각성을 실제 이상으로 부각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QDM 지표를 사용할 경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력집중이 매년의 등락이 없이 급상승한 것처럼 오인하게 한다는 점이다. 즉 30대 그룹의 자산총액이 GDP에서 점하는 비중은 2001년 49.2%에서 2011년 100%에 이르기까지 한 번의 조정도 없이 급증하였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생산과 매출에서 해외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이들 대기업의 해외 현지 생산 관련 부가가치 창출활동이 분자 지표에는 반영되지만 분모 지표(GDP)에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만큼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QDM 지표의 추세 왜곡 문제가 중화될 수 있겠으나 안타깝게도 2005년 이후 FDI 역조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sup>18)</sup> <표 9>의 비교표는 GDP를 분모로 하는 QDM 지표의 한계와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

으며, 편의상 QDM 지표를 사용해야 한다면 해석에 많은 주의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표 9> QDM 지표의 상향편의 및 추세왜곡

(단위: 집중도, %)

구분		2001	2003	2005	2007	2009	2010	2011	
자 산	4대	GDP(A)	26.1	27.8	27.6	31.6	39.4	42.5	48.1
		자산총계(B)	17.3	18.1	16.9	17.7	16.1	17.5	18.9
		편의(A-B)	8.8	9.7	10.7	13.8	23.3	25.1	29.2
	30대 전체	GDP(A)	49.2	49.2	55.9	67.9	89.4	92.5	100.3
		자산총계(B)	32.5	32.0	34.2	38.1	36.5	38.0	39.4
		편의(A-B)	16.7	17.2	21.7	29.8	52.9	54.5	60.9
매 출	4대	GDP(A)	35.0	30.6	32.5	33.1	40.5	45.2	50.3
		매출총계(B)	21.8	18.7	17.4	17.3	18.0	19.3	20.1
		편의(A-B)	13.2	11.9	15.1	15.8	22.5	25.9	30.2
	30대 전체	GDP(A)	57.3	46.5	58.2	62.3	78.2	85.5	97.5
		매출총계(B)	35.7	28.3	31.2	32.6	34.8	36.5	39.0
		편의(A-B)	21.6	18.2	27.0	29.7	43.4	49.0	58.5

두 번째로 살펴볼 사안은 개방경쟁 환경에서 경제력집중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대기업은 해외시장을 염두에 두고 글로벌 투자를 하고, 매출의 절반 이상이 해외시장에서 발생한다. 이 경우 시장집중도를 추정할 때에는 해당 기업의 국내 매출액이 해당 시장의 국내 총 판매액에서 점하는 비중으로 계산하고, 해외 매출은 시장집중도 계산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경제력집중도 추정 시에는 생산과 매출이 해외에서 발생해도 연결재무제표를 통해 국내 모기업의 실적에 포함되면 집중도 계산에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이 안 되면 경제력집중도가 떨어지는데 이런 경우 경제력집중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일 수 있다.

시장집중도를 추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경제력집중을 추정할 때 해외 수출을 제외하면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가? 즉, 30대 그룹의 국내매출액을 국내 총매출액으로 나눈 지표를 ‘국내 매출집중도’로 정의하고 시산해본 결과는 <표 10>의 내용과 같다. 이 시산을 위해 본 연

18) 각주 10 참조



구에서는 KISVALUE DB 상에서 특정기업의 매출을 내수와 수출로 구분한 통계, 그리고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에서의 업종별 매출액 및 제조업 평균 수출비중 통계를 활용하였다. 19) 업종별 수출비중 통계는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제조업 평균 수출비중으로 업종별 매출 총액을 개략적으로 추정한 후, 해외부문을 제외한 국내 매출집중도를 試算한 결과가 <표 10>의 B-행이다.

<표 10> 수출을 감안한 30대 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 시산

구분		2003	2005	2007	2009	2010	2011
4대	매출집중도(A)	18.7	17.4	17.3	18.0	19.3	20.1
	국내매출 집중도(B)	16.8	15.3	10.1	11.1	14.1	12.8
	편의(A-B)	1.9	2.1	7.2	6.9	5.2	7.3
30대 전체	매출집중도(A)	28.3	31.2	32.6	34.8	36.5	39.0
	국내매출 집중도(B)	23.9	29.4	20.3	22.8	26.9	25.5
	편의(A-B)	4.4	1.8	12.3	12.0	9.6	13.5

여기에서도 비교목적으로 <표 6>의 매출집중도를 A행에 병기하였다. <표 10>은 경제의 개방성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30대 그룹의 경제력집중도(A)는 최근에 약 10%p 이상 과대평가되고 추세 해석에서도 <표 9>와는 또 다른 편의가 발생함을 보여준다. 즉, 국내활동 기준으로 집중도를 측정하면 30대 그룹의 매출집중도(B)는 2005년 29.4%로 가장 높고 최근에는 26.9%(2010)에서 25.5%(2011)로 오히려 하락하였다. 특히 갈수록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며 수출을 주도하는 상위 기업집단의 경우 국내 매출집중도는 2005년의 15%대에서 최근에는 13% 내외로 낮아졌다. 즉, A행의 집중도와 B행의 집중도는 상반된 추세변동을 보인다. 회계기준상의 차이를 무시하고 <표 6>과 <표 10>의 추정결과만 놓고 보면, 전체로는 상위 기업집단의 매출집중도가 상승한 듯이 보이지만 이는 해외매출 신장에 의한 효과이며, 국내경제에서의 비중은 오히려 하락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시산이기는 하지만 <표 10>의 내용은 경제의 개방성을 간과한 경제력집중 논의는 QDM 지표가 아니라 해도 문제의 본질과 실상을 왜곡하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19) 제조업 부문의 수출비중 통계는 다음과 같다(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2006년 43.9%(대기업 55.9: 중소기업 23.4) → 2008년 41.5%(57.9: 15.6) → 2010년 43.2%(59.0: 22.6)

## VI. 맺음말

경제력 일반집중을 막았다며 대규모기업집단을 지정하여 별도의 규제를 부과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 때문에 경제계는 경제력집중 규제를 역차별 또는 자승자박(自繩自縛) 규제라며 완화 또는 폐지를 촉구해왔다. 세계시장을 무대로 해외 대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국내 대기업에게만 불리한 규제를 가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GDP에서 상위 기업집단의 국민경제적 비중이 갈수록 급증하고 경제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력집중을 막기 위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규제 강화론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의 선거 과정에서 여야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발전했고, 그 후 국회에서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강구하면서 경제계의 불만과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제력집중 규제론의 주요 논거와 한계를 살펴보는 한편, 2001~2011년 기간 중 경제력집중도를 추정, 분석하여 규제 강화론의 타당성을 간접적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GDP 대비 자산 또는 매출비중(QDM)'은 측정이 용이하기 때문에 경제력집중 지표로 널리 활용되지만 동 지표는 서로 비교할 수 없는 변수를 비교하는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경제력집중의 순위 및 추세변동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편의를 야기한다. 동 지표에 의한 추정결과는 최대 60%의 상향편의를 보이며, '기업패권가설'이 주장하듯이 추세적으로 계속 급증하는 듯이 보이게 하는 錯視와 歪曲을 초래한다. 같은 기준으로 주요국의 20대 기업의 자산집중도를 추정하면, 스웨덴> 프랑스> 독일> 한국 ≍ 영국> 일본> 미국의 순서로, 한국의 경제력집중은 프랑스나 독일보다 높지 않다.

둘째, QDM 지표의 대안으로 고용, 매출, 자산집중도를 추정한 결과 최근에 집중도가 다소 높아졌다. 그러나 추세적 상승의 시작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매출집중지표의 경우 다른 지표에 비해 상승폭이 비교적 높으나 동 지표는 계열사 간 거래의 이중계상 관행과 해외매출(수출)의 포함으로 인한 왜곡 등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다. 만약 예정대로 2013년부터 K-IFRS(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을 변경하여 사실상 지배력 기준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면 중복계상 문제가 사라지면서 매출집중도가 향후 하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고용과 자산을 기준으로 볼 경우 전자는 3.6%(2001)→4.7%(2007)→5.1%(2009)→

5.9%(2011), 그리고 후자는 32.5%(2001)→38.1%(2007)→36.5%(2009)→39.4%(2011)로 최근 들어 다소 상승하였다. 최근에 이처럼 집중도가 다소 상승한 까닭은 무엇보다도 대규모 M&A가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나 이와 같은 M&A 이벤트가 앞으로 계속될 지는 의문이다. 한편, 대규모 M&A는 공정위에서 기업결합 심사를 통해 승인된 사안이기 때문에 M&A를 통해 특정 대기업집단의 비중이 높아졌다고 해서 사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적 모순일 것이다.

셋째, 위 분석 결과와 더불어 ‘기업패권가설’과 ‘주류 경제학의 적대적 전통’에 내재하는 문제점, 그리고 세계화 개방경쟁의 시대에 요구되는 기업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에 비추어 볼 때 경제력집중 방지를 위해 우리나라만의 사전규제를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만약에 규제를 해야 한다고 해도 현행 자산규모 5조 원 이상 기준을 높여 규제대상을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 규모면에서 4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기업집단을 똑같이 규제하는 것은 역진적인 규제이며 하위 기업집단의 추가적인 성장기회를 제약하는 부작용이 심각하다. 본 연구의 자산집중도를 분해해 보면 1~10대의 비중은 29.4%로 높은 반면에 11~20대는 6.6%, 21~30대는 3.5%로 미미한 수준이다. 2009년 이후 집중도의 증가 또한 10대 그룹이 주도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면, 최소한 지정기준이라도 현행의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에서 대폭 줄여 10대 기업집단으로 축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경제력집중 통계의 추정 관련 본 연구의 한계와 과제는 다음과 같다. QDM의 우선적인 대안으로 특정 대기업군의 부가가치 창출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기준의 변경으로 인해 2005년 이후 제조 원가 명세서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동 지표를 추정할 방법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註釋자료를 이용하여 추정을 시도했으나 원자료에 누락이 많고 K-IFRS가 도입된 2010년 이후에는 IFRS를 채택한 기업들의 경우 아예 註釋이 없어서 부가가치 집중도를 유의미하게 추정할 방법이 없었음을 밝혀둔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금융업의 차별적인 특성 때문에 비금융업 부문을 대상으로 집중도를 추정, 분석하였다. 그러나 금산분리는 경제민주화 관련 또 다른 쟁점 사안인 만큼 향후 연구에서는 금산복합집중 현상과 국민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본 논문의 집중도 추정 방식을 다른 나라에도 확대, 적용하여 경제력집중의 현상과 원인, 정책 접근방식을 국제 비교·분석하는 후속 연구도 의

미가 있을 것이다. 기업집단 형태가 유지되고 경제력집중 규제가 계속되는 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에 Lee, et.al.(2012)의 연구가 보여주듯이 앞으로는 경제력집중이 경제성장, 소득분배, 물가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 다양한 주제로 더 많은 실증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장지상·이근기,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2011년 하반기 LEG 발표.
- 위평량, “국내 재벌의 팽창 양상과 출자총액제한제도, 그리고 대응 방안 모색”, 박병석 의원 주관 토론회 발제, 2011. 9.
- 최정표,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의 정태 및 동태적 분석”, 산업조직연구, 2004.
- 황상현·김현중, “재벌세 도입에 대한 논의와 정책 모의실험”, 규제연구 2012.
- 황인학, 『경제력집중, 한국적 인식의 문제점』, 한국경제연구원, 1997.
- 황인학, “경제력 일반집중의 기여요인에 관한 연구”, 산업조직연구, 2000.
- 황인학, “국제비교로 본 지주회사 규제의 문제점”, 규제학회 춘계학술발표, 2012. 5.
- 황인학, “대기업집단 정책의 쟁점과 과제”, 산업조직학회 하계학술발표, 2012. 6.
- Bank, Steven A. and Brian R. Cheffins, “The Corporate Pyramid Fable”, *Business History Review* 84, 2010.
- Berle, Adolf; Means, Gardiner,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 1932.
- Braguinsky, Serguey; Lee Branstetter; Andre Regateiro, “The Incredible Shrinking Portuguese Firm”, NBER Working Paper, 2011.
- Chandler, Alfred D., 『The Visible Hand: the Managerial Revolution in American Busines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7.
- Galbraith, J. K., 『The Age of Uncertainty』, Houghton Mifflin Company, 1977.
- Ghemawat, Pankaj; Tarun Khanna, “The Nature of the Diversified Group: A Research Design and Two Case Studies”,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1998.
- La Porta, Lopez-de-Silanes, and Shleifer, “Corporate Ownership Around the World”, *Journal of Finance*, 1999.
- Keun Lee, Byung-yeon Kim, Young-yoon Park, Elias Sanidas, “Big business and economic growth: Identifying a binding constraint for growth with country panel analysi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2012

- Micklethwait, John and Adrian Wooldridge, 『The Company: A Short History of a Revolutionary Idea』, Chronicles Book, 2003.
- Morck, Randall, “How to Eliminate Pyramidal Business Groups: The Double Taxation of Intercorporate Dividends and Other Incisive Uses of Tax Policy”, in 『Tax Policy and the Economy』 Vol. 19, MIT Press, 2005.
- Morck, Randal, “The Riddle of the Great Pyramids”, NBER working paper, 2009.
- Munkris, John R.; Knoedler, Janet T., “The Existence and Exercise of Corporate Power: An Opaque Fact”, *Journal of Economic Issues*, 1987: 1679-1706.
- Ottosen, Garry K., *Monopoly Power: How It Is Measured and How It has Changed*, Crossroad Research Institute, 1991.
- Williamson, Oliver, *The Economic Institutions of Capitalism*, Free Press, 1987.

## An Empirical Evaluation of Korea-Specific Regulation on Economic Concentration

Inhak Hwang · Onelack Choi

Since 1981, Korea has maintained an unique regulatory framework on economic concentration. While most countries manage competition laws to discipline the market concentration and its subsequent problems, Korea rather focuses on restraining the aggregate concentration, esp. the economic power of the big chaebols. Recently the inhospitality tradition against the business groups is being aggravated mostly due to the political rhetoric of economic democratization propagated during the 18th presidential race in 2012. Why has the economic concentration been so much social concern in Korea? What makes the Korea specific regulation persistent and even stricter in the globalization era of open competition? In this paper we evaluate the logics and myths behind the regulation in the contexts of economic theory and history. We also estimate theoretically consistent measures of concentration of the 30 large chaebols and test the corporate hegemony hypothesis, using the data of employments, sales, assets, and diversification indices. The major finding is that various measures used in previous literatures have a feature of ‘quick-and-dirty ones’ in that they lead to significantly upward biases up to 60 percent and a misleading interpretation in the long-term change of economic concentration.

Key words: Economic Concentration, Business Group, Corporate Hegemony, Economic Democratization, Competition Policy

